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독일 보험업계, 중앙은행의 보험산업 감독 반대

□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시 나타난 은행부문의 자본 적정성 감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시스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.

- 현재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연합(Christian Democratic Union)은 자유민주당(Free Democrats Party)과 연립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인 Bundesbank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, 나아가 보험 감독권 부여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* 독일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2002년 5월 연방은행감독청, 연방보험감독청, 연방증권감독청을 연방금융감독청(Bafin: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)으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은행, 보험, 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·감독을 수행해옴.

□ 독일보험협회(GDV: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)는 Bundesbank에 의해 은행·보험이 동시에 감독될 경우 이익상충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도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산업은 대안으로서 EU의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를 선호한다고 밝힘.

- GDV는 Bundesbank에게 감독권이 부여될 경우 은행과 보험간의 이익상충이 발생할 경우 은행권에 우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.
-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모델은 은행산업과 다르며, Bundesbank에는 이러한 보험권의 특수성을 감시·감독할 경험과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.
 - 투자리스크뿐만 아니라 폭풍우, 인구변화 등 보험산업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리스크도 반영할 수 있는 감독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.
- 또한 EU의 리스크중심 감독체계(three pillar supervision)에 따라 리스크의 양적 관리(자본 적정성 감독), 리스크의 질적 관리(리스크관리 시스템 상시감독), 리스크공시(시장규율) 등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될 수 있다고 밝힘.

□ 독일은행협회는 Bundesbank와 Bafin의 금융관련 정책결정이 상충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밝힘.

(Reuters, 10/8)